

산자부, 청정생산기술인력 2006년까지 6천명 양성

산업자원부는 생산공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감축하는 기술을 다루는 청정생산기술인력을 2006년까지 매년 2천명씩 양성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현재 390억원인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고 단기교육과정을 확대·보급하며 전문국가기술자격증 도입, 기술대학 및 신규학과 등 교육기관 확충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가청정지원센터는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내달중 박사급 전문인력을 채용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 7월 환경관련 연구소와 2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정생산기술인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기술인력은 2만2천명이며 국제환경규제 등의 강화로 향후 3년간 매년 2천명의 인력 수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03년 재활용 지원금 3억원 지급 예정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안복현)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자율재활용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총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회는 2003년 상반기 재활용사업자 56개소에 스티로폴 재활용 실적 4,877톤에 대한 지원금 85,179천원을 지급했다.

상반기에는 법 시행 초기로 많은 지급 대상자들의 서류준비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지급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협회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아 재활용 의무생산자인 전자제품제조업체 59개소, 음식료품·의약품제조업체 13개소, 농수축산업 및 유통업체 25개소, 농수축산물상자 제조업체 33개소 등 총 130개소를 대신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페스티로폴을 회수하여 잉고트 등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지자체 및 민간재활용사업자들과 재활용 위수탁계약을 맺고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의 ☎ (02)761-0282]

경기도, 자체 대기배출 허용기준치 설정

경기도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치보다 강화된 자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치를 설정, 각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道)는 이를 위해 기준치를 설정한

뒤 올해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 가능하면 내년부터 각 시설에 적용할 방침이다.

도가 현재 허용기준치 설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₂)이며 이 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치가 설정될 경우 도내 12개 발전시설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소각시설 등 다른 배출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자체 허용기준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시·도지사 위임사항)에 의해 행정조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대기오염이 심각해 이번엔 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치 설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 32개 위반배출업소 적발

부산시는 8월 한달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대기 11개, 수질 7개, 비산먼지 14개 등 32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9개 업체에게는 고발 및 폐쇄명령·사용중지 등을, 3개 업체에게는 개선명령과 조치이행명령을, 8개 업체에게는 비산먼지 개선명령 등을, 12개 업체에게는 경고 및 과태료(37만원) 부과 조치 등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시는 자동차 2천836대에 대한 배출 가스 점검을 벌여 기준치를 초과한 160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14대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한강환경감시대, 악덕 환경사범 구속

한강환경감시대에는 폐수배출시설인 폐가스세정시설 2기, 폐수저장시설(용량 5톤) 1기를 양주군청으로부터 위탁처리토록 허가를 받아 조업해 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6개월 동안 월평균 0.5톤씩 폐수 3톤을 위탁처리하지 않은 채 하천에 몰래 버려온 경기도 양주군에 소재한 S넷트 대표 H씨를 적발·조치(2003.9.18)했다.

이번에 적발된 S넷트는 섬유가공업체로서 이곳에서 버린 폐수는 COD가 허용기준(90PPM)을 3.7배 초과한 334PPM, 부유물질(SS)은 허용기준(80PPM)의 2.8배인 225PPM, 광유류(N-H)은 허용기준(1PPM)의 20.3배인 101.6PPM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환경감시대에는 팔당호 유역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활동을 보완키 위해 '97년 10월에 발족한 중앙정부 차원의 단속기구로서 그동안 집중적인 단속으로 유역내 오염원관리에 큰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특히 악질적인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하여 구속수사

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앞으로도 한강환경감시대에는 팔당상수원 유역내 불법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여 수질보전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줌은 물론 환경사고에 방에 크게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피해 방지 지자체도 배상"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차량 소음 등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방지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시공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행정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 도로변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민 934명이 최근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와 부산시 등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서 소음도 65dB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623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총 1억9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특히 정신적 피해배상 등의 책임 범위에 대해 시공사가 70%,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부산시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번 결정과 같이 환경 피해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연대책임 배

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 비율이 명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시공 건설사는 도로변에 아파트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방음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규제소음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축·분양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는 건설사에서 고가도로에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구조·관리상의 문제를 들어 불가하다는 통보만 한 채 방음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각각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향신문]

정화조 찌꺼기·분뇨증가세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정화조 찌꺼기와 분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2003년 서울시 환경백서 '서울의 환경에 따르면 지난해 수거한 분뇨와 정화조 찌꺼기(오니)는 하루 7855kl로 6년전인 지난 96년(6350kl)에 비해 하루 1500kl 이상 늘어났다.

지난 96년 하루 6350kl 발생하던 서울시내 분뇨 및 정화조 오니는 98년 7049kl를 기록, 하루 7000kl를 처음으로 넘어섰으며 99년 7315kl, 2000

년 7498kl, 2001년 7837kl로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시내 분뇨와 정화조 오니는 중랑, 서남, 난지 하수처리장 내 분뇨처리장으로 옮겨져 처리되고 있지만 분뇨·정화조 오니 하루 수거량이 시설 처리용량에 육박,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자부,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

산업자원부는 내년부터 전국에 산재된 490개 산업단지를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이에 앞서 시화, 울산, 충주 등 3개 산업공단에 대한 시범사업을 착수키로 했다고 지난 10월 16일 밝혔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국내 지역 산업단지, 산·학·연,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생태산업단지란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폐기물,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연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자원화해 산업단지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산업단지를 뜻한다.

환경신기술 발표회 개최

제4회 환경신기술 발표회가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지난 10월 16일

부터 18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발표회에는 환경신기술 관련 업체 관계자와, 학계 지자체 공무원 등 천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환경신기술을 접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개회식에서 이규용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은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신기술 개발과 보급에 앞장선 포스코건설, 동성이엔지, 그린기술산업, 종합공해, 대경크리코 등 5개 업체에게 상을 수여했다.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와 신기술 적용사례 발표와 환경신기술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환경부 김학주 환경기술과장은 환경기술 개발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사전오염예방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경복원, 지구환경보전 등 공공 성격의 첨단 환경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발암물질 배출량 절반 울산 미포·여수산단 굴뚝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을 배

출하는 곳은 울산미포산업단지와 여수산업단지로, 이들 두 곳이 전국 배출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5일 2001년 1년 동안 전국의 50명 이상 화학물질 배출업체 1,023곳이 내보낸 유해 화학물질량은 모두 112종 3만6천여t이며 이 가운데 16%인 5,767t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화학업체가 밀집한 울산미포산단은 24종 1,564t, 전남 여수산단은 22종 1,118t의 발암성 물질을 배출해 두 곳이 전국 배출량의 46%를 차지했다. 이들 두 산단은 또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젠·염화비닐·산화에틸렌 등의 전국 배출량 가운데 68%를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에 100t 이상의 발암물질을 배출한 산단은 이밖에 대산·포항·구미·하남·달성·온산·반월 등이다.

특히, 달성산단은 대형 석면 브레이크패드 제조과정에서 전국 배출량의 대부분인 3,627kg의 석면을 내보냈으며, 전주2공단은 발암성 용매인 디클로로메탄 전국 배출량의 78%인 712t을, 구미산단도 발암 용매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국 배출량의 57%인 190t을 배출했다. 또 여수와 대산산단은 독가스인 포스젠을 각각 202kg와 50kg 내보냈다.

이들 발암물질은 매립처리하는 포항산단을 빼고는 대부분 굴뚝이나 배관

연결부위를 통해 대기로 배출됐다.

한편, 환경부는 기업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할 수 있도록 연내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자발적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전 3.4산업단지 악취 발생원은 10여곳

대전 3.4산업단지 주변의 만성적인 악취는 공단 내 10개 기업체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등 시 산하 시설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14일 대전시의 3.4단지 악취저감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 주변의 악취는 한국타이어, 동양환경, 한솔제지, 롯데제과 등 10개 기업체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대전 시 소각장, 폐수중말처리장 등 시 산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악취농도가 기준치(2도)를 초과하는 3도 이상의 지역은 동양환경 앞(3도), 롯데제과 앞(4도), 한국타이어 정문(3도), 금고동 쓰레기매립장(4도), 목상동 사무소 주변(3도)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솔제지는 물건이 타는 듯한 냄새를 유발하는 알데히드 화합물을 상당량 배출하고 있었으며 금고동 매립장과 유성구 퇴비화시설에서는 황화물 계통의 화합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악취는 하천을 따라 송강동 등지까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 피해 원인으로 밝혀졌다.

용역기관은 올들어 2차례(봄·여름) 악취를 측정할 데 이어 오는 12월까지 2차례 측정과 분석을 거쳐 내년 1월말께 최종보고회를 갖고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염소자동투입기 자체개발

현업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염소 자동투입기를 자체 개발한 뒤 특허까지 출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원주군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박상윤(36·환경8급)씨와 송용환(38·화공9급)씨는 간이상수도용 무동력 악품투입기를 개발, 지난 5월 특허를 출원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1월 간이상수도의 소독실태가 다소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무동력 악품투입기를 개발기로 한 뒤 연구에 들어가 지난 4월 첫 개발한 자동투입기를 대둔산정수장에 설치, 6개월 이상 시험한 결과 그 우수성이 인정돼 내년부터 관내 50개의 간이상수도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동투입기는 특히 폐계량기를 활용해 유량의 유무에 따라 자동개폐

가 가능하고 유량속도에 따라 악품투입량이 자동 조절되며 2개의 직교류 전동기를 활용해 하나는 계량기에서 발전을, 다른 하나는 정량펌프를 가동하도록 개발됐다.

또 동력발생부와 투입부가 분리돼 별도 배관 작업없이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을뿐 아니라 일일사용량 5톤에서 5백톤까지 미량으로 조정,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식 조절기가 부착되어 염소농도 0.01pp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들 공무원이 개발된 염소자동투입기를 설치하면 기존 3백만원 하던 비용을 절반이상 줄일 수 있고 보수 및 유지관리가 쉽고 세균성이질 등 병원균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 주민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내공기 측정법 마련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대비하기 위한 실내공기 함유 유해물질 측정법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내년 5월부터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공기에 함유된 유해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10월중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실내공기에 많게는 외국기준의 5배 이상을 초과하는 유해성

분이 검출되고 있으며, 이는 하루의 80%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일반인들에게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기표원 생물환경과 김동석 연구사는 "내년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발효를 앞두고 건자재, 가구, 페인트 관련업체는 실내공기오염도가 낮은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표준화된 분석방법이 제공되지 않아 관련업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실내공기의 유해성분으로 분류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포름알데히드 및 석면섬유 측정법 등 6종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할 방침으로 이 규격들이 제정되면 관련업체의 친환경 제품생산과 국민의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에서는 관련업체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료별로 유해물질 방출량을 측정해 근본적인 원인규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방법(챔버법)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 규격을 ISO 등에 국제규격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시화지구 대기오염 자동감시체제 강화

시흥시는 시화공단내 대기오염배출업소에 대해 굴뚝에 오염물질 자동측정기(TMS) 12기를 올해에 설치키로

했다고 지난 10월 7일 밝혔다.

시는 에코서비스, 시화그린센터, 조일, 화승제지 등 현재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과 악취다량유발업체에 설치하게 된다.

대기오염자동측정기는 각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농도를 24시간 상시측정해 실시간으로 시와 경기도 환경관리센터 등에 전송, 상황판에 측정치가 나오도록 함으로서 24시간 상시 폐기물 불법소각 등 비정상가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다.

1회용품 사용업소 423개 적발

1회용 도시락 등 1회용품을 사용한 423개 업소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과한법률을 위반해 적발됐다.

환경부 광결호 차관은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423개 업소를 적발해 이중 47개 업소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10월 6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형업소와 신규 규제업소를 중심으로 지난 9월 전국 3만3천958개 업소를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시락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가 전체 적발업소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사용억제 위반이 전체의 87.7%인 3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객에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32건, 광고선전물을 제작해 배포한 경우가 14건이었다.

또한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판매매장에서 재활용품판매매장을 미설치한 사업장도 6개 업체나 있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해 자치단체에게 조례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화·반월공단 소형소각시설 32기 연내 폐쇄

수도권지역의 주요 대기오염원 역할을 해온 시화·반월공단이 다이옥신 배출의 주범인 소형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쇄를 유도함으로써 대기질을 크게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인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99년 665기이던 시화·반월공단내 소형폐기물 소각로(시간당 소각능력 25 200kg)가 2002년말 47기로 크게 줄어든데 이어 삼영화학 등이 환경청의 폐쇄권고를 받아들여 금년말까지 32개를 폐쇄키로 합의했다.

소형 소각로의 경우 측정기준치가 없어 다이옥신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으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어 환경

청은 업체들을 상대로 폐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1천511건이던 약취민원이 2001년 730건, 2002년 404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 배출업소의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확대대상인 ㈜두산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조기설치를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부터 정상가동토록 할 계획이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금리 변동

10월 1일부터 4.08%에서 4.34%로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이치범)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대출금리가 각종 정책자금의 금리인상에 따라 10월 1일부터 연4.08%에서 연4.34%로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시중대출금리보다 낮게 운용되는 등 일정한 격차를 두고 책정되고 있으며 향후 금리인하 추세가 지속될 시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공사는 적절한 금리변동 및 재활용업체의 애로사항을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경제사회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수찌꺼기 해양투기 급증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하수슬러지(하수 처리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를 땅에 직접 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활용이나 소각처리 시설 건설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해양투기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4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전제회(한나라·경기·광명)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된 곳은 전남 함평, 경남 고성 등 2개소에 불과하며 포항·진주·안동·마산 등 4개소는 사업이 취소됐다. 그나마 전남 함평은 시·군간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못했고, 실제로는 경남 고성의 35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예산의 0.7%에 불과하다.

사업이 부진한 지자체는 소각시설 건설시 주민 반대가 심하고 처리비용도 높아 하수슬러지를 대부분 해양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처리비용은 해양배출이 t당 2만6000원, 매립이 2만7000원, 소각이 5만5000원으로 소각비용은 해양배출에 비해 2배가량 비싸다. 이에 따라 바다에 버려지는 하수슬러지의 양은 2000년 3056t(전체 양의 64%), 2001년 3817t(73%), 2002년 4083t(72%)으

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이후엔 그동안 매립되던 양(2002년 530t)마저 대부분 해양투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오염 방지조약인 '런던협약'에 가입한 세계 79개 국가중 하수슬러지를 해양배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해양투기량이 0.2%에 불과하며 건설자재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43.6%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하수슬러지 재활용 비율은 10%에도 못미친다.

전의원은 "중금속 등이 함유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이 곧 발효될 예정이지만 대비책이 미비하며 해양배출 허용기준도 마련돼 있지 못하다"며 "하수슬러지 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영전문가 기획토 발족

매일경제와 환경재단은 "환경경영이 경쟁력이다"라는 기획시리즈를 위해 국내 환경경영 전문가들로 기획위원회 구성했다.

기획위원장은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학장이 맡았고, 기획위원으로는 김민주 리드&리더 대표, 김상희 여성민우회 대표, 김재욱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 김정옥 서울대 환 경대학원장, 김호철 법무법인 한울

대표 변호사,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박중식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소장,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한근태 한스컨설팅 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획위원회는 앞으로 우수 환경경영 사례를 발굴·심의하는 등 이 기획시리즈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환경경영 관련 특별 기획도 이 기획위원회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조동성 기획위원장은 "환경경영이야말로 21세기 기업 생존을 위한 키워드"라며 "이번 기획시리즈가 기업가들에게 환경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경 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건강수첩 있으나 마나

건강진단 내용 형식적...이용률 10%에 그쳐

크롬산, 석면, 특정분진 등 11개 유해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건강관리수첩의 이용률이 1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문종(경기 의정부)의원에게 제출한 '건강수첩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617명 가운데 69명만이 수첩을 이용해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1년과 2002년에도 각각 90명과 151명만이 이용하는 등 건강수첩 활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2천 891명의 근로자 가운데 현재 재직중인 2천 264명은 직장내 건강진단을 이용하고 있어 실제 건강수첩을 이용해야 하는 근로자는 617명에 이른다.

홍 의원은 "공단이 지난해 건강수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건강진단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이어서 근로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우선 건강진단의 내실화를 통해 건강수첩 소지자에게 진효횟수의 증가, 비용지원 문제 그리고 장기연속 수진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관리수첩은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석면 등 11종의 유해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해 이직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건강진단 대상자는 1년에 1회씩 무료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1회 진단 비용은 평균 5만 2천 원이다.

환경공단, 하수처리장 329곳 확충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8개 다목적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 329개소가 확충되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및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또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원순환관리체계 구축사업 및 매립가스 발전사업이 본격화되고 수도권 매립지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환경관리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9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기초인프라를 구축해 기초생활 환경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쾌적한 생활공간조성을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 측정관리 및 환경시설 설치지원 등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상·하수로 정비기본계획을 정부에서 승인·설치인가 전에 사전 기술검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LG 친환경부품 구매 시스탬가동

삼성전자·LG전자가 친환경 부품구매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는 카드뮴·크롬·브롬계 등 6개 핵심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 전자제품 생산을 위해 내부 지침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업체에 인증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그린 부품 구매 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반도체 및 LCD 공급품 중 리드프레임·EMC·PCB·포장재·잉크등 환경 유해물질을 함유한 부품을 전면 금지하는 '녹색 구매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가스(CFC)

등을 제조 공정에서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삼성은 또 내년 1월부터는 '에코파트너 인증제'를 실시, 내년까지 녹색구매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LG전자(대표 구자홍)는 품질센터 유해물질분석실을 본격 가동, 유해물질이 포함된 부품을 선별함으로써 친환경 부품 구매체제로 전환했다. 이 회사는 환경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부품을 개발중에 있으며 협력 업체들이 친환경 부품을 개발할 경우 비용을 줄

여주기 위해 품질 센터의 유해물질분석실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소니의 그린파트너십(GP)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소니·도시바·ST마이크로·필립스등은 자체적으로 녹색구매 관리 지침을 제정했고 특히 소니는 GP 인증을 받지 못하면 거래중단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

12월

환경기술인
실무교육

환경관계법 실무적용 및 단속지침과 적발조치사례

* 본지 128페이지 참조

환경오염방지 신기술발표회 및 환경정책설명회

- 11월 20일(목) 삼성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센터 320호 - *48페이지 참조